

제416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업무보고
 - 외교부
 - 통일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재외동포청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8
o 간사(김영배·김건) 인사	8
2. 업무보고	9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15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보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위원장으로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첫 번째 전체회의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제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점에 대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그 첫걸음을 참으로 의미 있게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높은 경륜과 철학을 지니신 여러 중진 위원님들과 외교통일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갈등의 구조와 북미 간의 밀착관계 강화 등으로 인해 우리가 모색해야 할 외교적 해법은 날로 난해해지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정책과 남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경륜과 지혜를 모아 대처한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는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지금 인사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준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회의 순서는 먼저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교섭단체별 간사 위원을 선임한 이후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 오른쪽의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해서 오른쪽 줄 제일 마지막 차지호 위원님까지 하시고 그다음 왼쪽의 김건 위원님으로부터 왼쪽 줄 마지막 홍기원 위원님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외교통일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된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요즘은 외교가 국익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는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맡게 돼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외통위는 중단 없이 정말 우리 국익을 지키는 보루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부터 쭉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22대 전반기에 외통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외교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국익을 위해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성락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잘 협의해서 활로도 찾고 또 우리 외교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저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괴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 제가 자청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위원회가 초당적으로 격의 없이 토론하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 서울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21대도 외통위에서 꽤 긴 기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21대보다 22대에 들어와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의 평화나 동북아와 국제 정세에 대응해서 우리의 국익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역할 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꿈꾸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남북 간 전단 살포와 오물 풍선이 오가고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상임위가 늦게 열린 만큼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고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건의하는 기구입니다. 태영호 내정자는 북한이 싫어서 떠나온 사람입니다. 북한과 대북정책에 대해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할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합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일변도의 편향 외교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평통 인사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내정 철회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위원입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국익 수호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안보, 국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외교관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통일부의 공무원 여러분들 또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의 가장 큰 목표는 역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일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평화가 곧 경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가 구축되어야 경제도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의 민생 문제도 해결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교의 목적이 국익이라는 점을 우리가 언제나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 접근을 통해서 외교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외통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을 위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전쟁의 위기나 군사적 충돌의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가 곧 경제고 민생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안보를 확보하고 또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위원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 부처 직원분들 포함해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국회 외통위에 있다가 21대 국회에서 잠시 다른 상임위 다녀왔습니다. 꼭 고향으로 돌아온 듯이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미처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다잡아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오늘입니다.

흔히 법사위를 상원이라는 말로 많이 부르는데요, 그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지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바로 외통위가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문제가 통상이든 무역이든 에너지든 그리고 기후변화, 모든 것을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칸막이라든지 상임위 칸막이에 가로막히지 않고 내치·외치 따로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가 상원에 가까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멋진 위원님들이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 하면서 국회를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시흥을 출신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난 21대 후반기에 이어서 22대 전반기에서도 외통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외교부·통일부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질서와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다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통일정책이 크게 두 가지 기본 방향과 원칙, 즉 첫 번째 평화 그리고 두 번째 국익 중심의 그런 외교 대외정책이 펼쳐지고 번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외통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지호 위원 경기도 오산시 차지호 위원입니다.

저도 글로벌 위기 현장에서 일을 했고 미래 위기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 세계 여러 현장에서 봤던 것은 생각보다 국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들은 이제 국내에서만 온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전환 시기에 여러 가지 다중위기들이 한반도에 큰 위험을 자초하고 있고 거기서 외통위의 역할들은 이제 단순히 외교를 넘어서 이런 위기들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외통위가 현재 전통적으로 다루는 주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한국에서 매일 미래를 위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왼쪽의 김건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35년간 외교 현장에 있다가 국민의힘 의원으로 온 김건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국민의 지혜를 우리 외교에 담아내는 데 제가 일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웅 위원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입니다.

한 30여 년 저쪽 편에서 답을 쓰거나 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는데 입장은 바꿔서 앉으니까 좀 느낌이 각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 김기현 위원입니다.

전 세계가 강대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자국 중심으로 폐쇄적인 외교정책,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강화하면서 격변의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우리 외교부·통일부 또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통의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국익을 잘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보듬는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익 차원에서 기坦없는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을 만들어 나가고 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또 같은 의견이 있을 때는 더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기를 바라고 저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위원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훌륭한 어른들하고 같이 하니까 참 좋네요.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 또 이름이 이재정 전 위원장, 이재강, 거의 삼총사입니다.

뮤지컬 삼총사도 있고 트로트 삼총사도 있는데 우리 외교안보 또 평화에 멋진 모습도 진짜 기대가 큽니다.

외교안보에는 진짜 여야가 따로 없고 외교전략 자체의 맵이 보수·진보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저는 한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고심의 흔적들을 꼭 국민들에게 신뢰로 보여 주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수 위원 분당갑 안철수입니다.

21대 후반기에 외통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22대 전반기에도 함께 이렇게 이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바로 이 외교통일 분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국정감사를 갔을 때 놀란 것이 스테이트 디파트먼트(State Department)에서 새롭게 사람들을 뽑는데 50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를 뽑는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근간해서 외교정책을 만드는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라든지 외교 분야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분야가 바로 과학기술외교 분야인데 과학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외교와 접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잘 못하게 되면 국익에 심각하게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과학기술 분야의 그런 엑스퍼티즈(expertise)를 외교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 21대 후반기부터 지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정말 외교부에서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돋는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형입니다.

초선이기도 하고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비교섭단체 구성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마음이 급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교직에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외교와 남북관계의 국익에 도움이 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교와 국익에 여야가 없다는 말이 야당 쪽에서 반대할 때 그것을 침묵시키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여기에 계신 외교부장관님을 비롯한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뒤에 배석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무역주의시대, 한때를 풍미했었던 자유무역시대가 이제 저물고 각 국가가 보호무역주의시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을 앞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다자외교 또는 양자외교 그것이 대한민국이 중심이 선 상태에서 어딘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나 통일 문제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마치 요동치듯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저도 외교부 출신입니다.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외통위에서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의 소위 가치외교와 대결적 대북정책에 대해서 걱정이 큰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이 대한민국의 우호세력을 확대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준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간사 선임하고 직원 소개 다 끝나고 난 뒤에 부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홍진 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로부터 파견되어 온 전근석 국장입니다.

김형진 행정실장과 입법조사관들 그리고 주무관, 직원분들 다 함께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5시25분)

○위원장 김석기 우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협의해 나갈 간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위원님을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김건 위원님을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위원님들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영배·김건) 인사

(15시26분)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잘 모시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외교가 국익이라고 하고 여러 선배님들 말씀대로 정말 세상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건 간사님.

○김건 위원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 김영배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민의힘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염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데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지혜가 우리 외교와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님들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업무보고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15시27분)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 각 기관장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먼저 듣고 업무보고 및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외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외교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선 2차관입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입니다.

정병원 차관보입니다.

임수석 대변인입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입니다.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태진 의전장입니다.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입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입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입니다.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입니다.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입니다.

(인사)

김홍균 1차관은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급 간부 명단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 제언과 고견을 들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통일부도 국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신임 차관입니다.

오대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입니다.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입니다.

김상국 정보분석국장입니다.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입니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입니다.

강연서 남북관계관리단장입니다.

이승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입니다.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승철 민주평통 사무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직무대리 동승철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동승철입니다.

먼저 22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식견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제22대 국회 들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현재 자문건의국장하고 위원지원국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금일 회의에는 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과장들이 배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첫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고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동포청이 성장해 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최영한 차장입니다.

오진희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김준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입니다.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21대 국회 외통위가 열린 것이 지난 1월 초였습니다. 물론 기수가 바뀌었지만 무려 반년이나 지났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외교·안보 현안들이 너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 시간 늦은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오늘 개회 시간도 늦고 질의도 축소되어서 매우 짧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교섭단체의 한계가 있어서 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이 의견을 전달할 수 없어서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료요구입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TV로 볼 때 정말 자료 제출을 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실제 경험해 보니까 진짜 안 하더군요.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수차례 거부하거나 원활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게 비밀인가, 왜 제출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인데요.

외교부장관님, 작년 일본 개황 보완본을 발간 중이라고, 그때는 임시였고 발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사항을 요청했는데도 없었고요. 관련 회의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키시마호 관련해 가지고 일본 쪽에서는 한국 정부만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도 나오는데 그것 역시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도 밝히지 않았고요.

부산엑스포에 대한 판단 여부에 대해서 메시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재호 주중대사의 특별감사 부분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석기 김준형 위원님,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질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통일부 제출 자료만……

○위원장 김석기 자료제출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준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통일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방금 김준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외교부·통일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민주평통 사무처와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외교부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는 본부 및 국립외교원 그리고 171개 재외공관에 현재 2542명의 정원이 있으며 이 중 59%가 재외공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외교부 예산은 약 4조 1900억 원 수준으로 정부 예산의 약 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부터 지난 2년간 주요 외교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전략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힘써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도움이 된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호하기 위해 크게 세 축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해 왔습니다.

첫째 한미일·한일중·NATO·G7 등 소다자 및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시키고, 둘째 규범기반 질서 강화와 새로운 규범 형성에 기여하며, 셋째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남미 등 소위 글로벌 사우스로 일컬어지는 개도국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업무 현황과 추진 계획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외교부도 민생을 챙기는 경제부처라는 마음가짐으로 능동적으로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AI·디지털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 논의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제협정을 2년간 29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께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국가의 보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수단과 이스라엘, 올해 아이티, 뉴칼레도니아 등 치안이 급속히 악화된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는 등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영사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한반도 업무와 외교 전략·정보, 국제안보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외교전략정보본부를 만들고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하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보다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외교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본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외교부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을 노력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오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축에 두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워싱턴선언 이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동 공동지침을 토대로 향후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주요 자금줄을 차단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해외 탈북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주변 4국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미국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정상 간 빈번한 소통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는 등 협력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현지 공관이 긴밀한 협업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면밀하게 준비 중입니다. 한미동맹은 미국 조야 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부 간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계를 비롯한 양국 국민 간 활발한 파트너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일본과는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정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양국 관계에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굳건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위해서 약 5년 만에 한미 일 정상회의를 재개한 데 이어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3국 협력을 개발, 우주, 과학, 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켰습니다.

올해 5월에는 4년 만에 우리 주도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인적 교류, 경제·통상, 기후변화, 고령화, 과학기술 협력,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 호혜적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2개월간 리창 총리 방한과 저의 중국 방문, 차관급으로는 최초로 개최된 한중 외교·안보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권과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경제·인문 교류 등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축적하여 양국 간 신뢰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12쪽, 한러 관계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 대리 공조에 동참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며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입니다.

외교부도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장관 취임 이후 경제단체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고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문턱을 낮추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로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와 해외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빨맞추어 우호적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자·소다자 경제안보 대화체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의 산업정책과 경제입법 동향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신흥·첨단기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차세대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을 주최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우주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7·G20 등 글로벌 경제협의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역내 경제성장을 위한 회원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6월에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와 사이버안보, 평화 구축 등 여러 논의를 선도하였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 선도국으로서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전 지구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처와 글로벌 녹색성장 촉진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을 연내에 출범시킬 것이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군축·비핵산·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신흥 안보 위협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선진 ODA 공여국을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유엔개발기구, 유니세프, 세계식량기구 그리고 난민기구 등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를 확대하고 자연재해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참가 대상을 늘리고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공연, 케이팝, 태권도 등 풍부한 문화·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화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문화강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지식 공공외교와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공공외교도 지속해 오고 있는 한편 디지털·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25쪽,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협력 외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상생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면서 인태 전략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는 오는 10월 정상회의 계기에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관계를 더 격상시킬 예정입니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태의 주요국들과도 폭넓은 협력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만큼 태도국과의 우호 협력도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에 영향력을 보유한 영·불·독 등 유럽국가 및 EU와 가치외교 파트너십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부 유럽국가들과 방산·원전 분야 그리고 중앙아 국가들과 에너지·플랜트·인프라 등 분야에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대규모 수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 이루어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통해 동 지역과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후속조치를 원활히 이행하여 실질적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쟁여 나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 노력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를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걸프국가들과 새로운 분야로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아프리카와는 6월 최초로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협력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 32쪽, 중남미·カリ브 지역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역내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금년 11월 남미에서 개최되는 APEC·G20 등을 활용하여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33쪽,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의 증진 외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사건 사고, 위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 관련 부처 간 간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 협동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곧 열리게 될 파리 하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 계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미래세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대상국을 확대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지속해서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권 발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 나가는 데 필요한 외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간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력 증원을 비롯한 외교 인프라 강화를 수차례 주문해 오셨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외교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다음으로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면서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고 주요 대남기구를 폐지하는가 하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의 침목을 제거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취해왔으며 5월 말부터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오물 풍선과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애민지도자, 사상지도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권위를 부각하고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한편 전쟁 준비 차원에서의 신형무기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식량 증산을 비롯한 경제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있고 외부 문화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내부 단속 강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정상회담을 갖고 신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셋째, 헌법에 기초하여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쪽,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추진입니다.

북한의 통일 지우기 시도와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더욱 확고하게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하고자 각계각층 국민과 전문가, 국제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5쪽, 북한인권 개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1차 연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6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1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UPR과 유엔 인권결의안 등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COI 후속보고서의 의미를 짚어 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으며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북한인권 국제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해 주시면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생존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북한의 호응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이산가족 실태조사 조기 실시,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교류기반 구축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현재 국제기구의 평양 복귀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세송이 물망초 상징 작업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를 활용한 외교적 협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였고 대통령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이날의 세 가지 약속을 정리한 10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쪽, 계속해서 정착 지원입니다.

탈북민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화천 제2하나원에 트라우마 치유시설인 북한이탈주민 마음쉼터를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위기구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고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이나 새출발 장려금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입니다.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통일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00명의 국민과 대화하는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0월에는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추가로 개관하여 지역통일 기반의 거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10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보고서를 활용하여 북한 실상 알리기 토크콘서트를 활발히 개최해 왔고 유튜브 채널 K의 공식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도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가 예정되어 있고 한반도 국제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와 심도 있는 통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 통일교육입니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통일관 확립을 위해 7월 초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개정·발간하였고 지난 5월에는 열두 번째 통일교육 주간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강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안보 현장견학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

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탈북민과 2030 차세대 통일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통일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성만월대 디지털 복원과 같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류기반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지구와 개성공단에서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재난·재해와 인도적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제가 사실 첫 회의라서, 특히 업무보고이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장관의 업무보고 자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5페이지에, 저는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북전단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 현황’ 해 가지고 국회 의원 4명의 이름이, 그것도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3명의 의원이 포함된 발의안의 법안명이 나와 있고 그 위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현재 결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견해를, 그것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라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것도 외통위 위원 3명이나 포함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써서 국회의원들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현재의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업무보고 형식을 띤,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이런 업무보고서를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것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수거해서, 일단 자료를 다 회수를 하시고 다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오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관련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통일부장관의 명확한 사과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석기 우선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5페이지에 우리 간사가 지적하신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통일부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에 이 의원들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신중 검토 필요하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는 통일부에서 이 위원회에 대한 어떻게……

줄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제에 이렇게 법안을 낸 거에 대해서 어느 시에서 로펌에다가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좀 중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그 로펌들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의뢰를 한 의뢰서, 그 사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조치를 좀 해 줘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통일부장관님, 방금 김영배 간사님과 윤후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일부로서 위원님들의 그 법안 발의 내용을 존중을 하고 통일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통일부가 위원님들께서 이런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리 입장을 정해 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통일부로서도 국회와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률 전문가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님, 로펌에 의뢰했던 의뢰서 사본을 좀 보내 주세요, 지금.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통일부에서 협조해서 의원실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걸 보내 줘야 내가 질의를 하지요, 그에 대해서.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좀 전에 김영배 간사님 또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 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점,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 취지는 당연히 공감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이것은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여기에서 담아서 안 하셔도 전체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을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질의로 가시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는 몇 분이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장관 답변은 너무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대북전단 문제들이 지금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중대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이 건을 극복할 수 있는 법안들을 사실 준비한 건데…… 아니, 통일부의 업무보고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다고 이것을 통일부 업무보고에 넣어서, 내용 중에 보면 바로 현재의 판결과 연결시켜서 매우 신중치 못한 법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자료는 당연히 회수되어야 되고 지금 이걸 추진했던,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에 대해서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관께서 지금 그렇게 열버무리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의사진행발언,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과 취지가 좀 비슷한데요. 김영배 간사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업무보고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감 표명과 사과를 하라는 거였지요, 자료는 회수를 하고.

그런데 통일부장관께서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전혀 관련 없는 말씀만 하셨어요.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확하게 사과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 이 점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홍기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홍기원 위원**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통일부의 임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핵심 임무로 하는 결로 정부조직법상 명시돼 있는데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어디를 봐도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부가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건지 아니면 이에 관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장관에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몇 분의 위원님께서 통일부장관께 그 입장을 듣겠다는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장관님, 뭐 입장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서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12페이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인식이 되었고 통일부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이 되었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통자문회의하고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평통자문회의 사무처와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면 권칠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남북 간에 긴장이 좀 고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권칠승 위원** 남북관계가 긴장,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권칠승 위원** 책임감을 좀 느끼시나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칠승 위원** 교류 협력을 확대해서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는 게 통일부의 어떻게 보면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책임감을 좀 느끼시겠네요? 안 느끼시나요? 이것 느끼셔야 되는데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선 북한의……

○**권칠승 위원**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 느끼시는 모양이네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니요, 남북관계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노력 뭐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까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책임감을 안 느끼시는 모양이네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좀 밀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맹목적인 대북 적대정책의 결과물이다 또 미국과 일본 중심의 편향외교의 당연한 결과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입장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절박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략적인 결합을……

○**권칠승 위원** 그러면 예측은 하셨겠네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경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현실적인 정보 말고요 여러 가지,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서 예측을 하셨겠네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계속 밀착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해 왔다라는 사실은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대책을 좀 세우셨겠네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칠승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NPT 체제를 우리가 더욱더 준수하고 쉽게 말해서 잔류하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워싱턴선언에 이어서 지금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NPT 체제를 존중한다라는 전제하에 한미 간에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권칠승 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여권의 지도부 격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여권의 지도부 격에 계신 분들, 심지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말씀도 최근에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부에 있는 사람이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요, 지금 여당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모르시나요, 이 내용을?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부 내의 인사가 그런 얘기 한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국내 뉴스를 전혀 안 보시나요, 장관님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행정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몰라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치권에서 하신 말씀하고 행정부 인사들이 한 말씀.....

○권칠승 위원 정치권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런 것은 언론 등을 통해서.....

○권칠승 위원 발언이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된 발언이네요? 정부 여당 내에서 혼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에서 빨리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이것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6월 2일 날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지 않으면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북한의 행태를 보면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는 형식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쪽으로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단……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저는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칠승 위원** 아니, 그 행위 자체의 위법 문제가 아니고요. 이 행위 자체가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정부의 입장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우리 민간단체에서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응해서 오물 풍선을 보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그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북한은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기**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저는 22대 국회 첫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제 정세, 한반도 정세,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나 남북관계 부분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가 하면 다 얘기하셨지만 북한은 김일성 때는 조선은 하나다 이러고 원 코리아 하다가 김정일 때는 낮은 단계 연방제 해서 사실상 투 코리아 이러다가 지금은 김정은에 와서 아예 노골적으로 적대적 두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입장이 아주 변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50년 동안에.

그런가 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분단 80년이 되면서 대부분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무관심, 그런가 하면 아예 비판론도 있고 젊은 친구들은 아예 부정적인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머리나 가슴에서 지워 버리고 이 상황을 방관한다면 아마 우리 민족사회의 큰 오점 내지는 과오가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제헌절입니다. 헌법 4조 다 아실 겁니다. 평화통일을 이루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 지향을 강조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생색도 잘 안 납니다마는 예전에 독립운동 하시던 선조들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역사와 대화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나간다는 어떤 자부심, 소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PPT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정부가 강경정책을 펴니까 긴장이 올라가고 남북 간의 상황이 악화되고 경색되고 결국은 이 남북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지금 이제 질의하시는 거지요?

○김기웅 위원 예, 질의입니다. 나중에 여쭤보려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가 있고요. 중요한 남북관계 지표들입니다. 대화, 이산가족 상봉, 인적 왕래, 물적 교류, 대북 지원이지요. 박근혜정부는 2015년에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20년에 지금 말씀하신 전단, 확성기, 전광판 못하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못하게 해서, 북한이 원했는지,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 줬는데 그렇게 북한의 비위를 맞쳤던, 맞춘 결과가 어떤 게 있었느냐? 남북관계가 뭐가 좋아졌느냐? 오히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냉면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우리 국민 자존심만 건드리는 일들이 계속 생겼었지요. 만만하게 보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도 강경정책, 보수 정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정책을 세워야 실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지난 50년의 남북대화 육백육십몇 번 한 것, 합의서 250개 넘는 것, 왜 이게 이 상황이 됐는지, 50년 동안,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회담이 667회, 합의서가 258건입니다. 7·4 공동성명이나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내용 다 똑같습니다. 같은 합의를 50년째 되풀이하고 만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70년이나 지금이나 남북관계가 과연 달라진 게 있느냐?

통일부장관님,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의 한국에 대한 입장은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웅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여기에 대화 한 번 더 해서 668, 합의서가 늘어서 259가 될 무었이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탈북민 얘기도 나오던데 우리가 정책 고객, 정책의 대상은 북한 정권만이 아닙니다. 2500만 북한 주민도 우리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시야에

있어야 되고 정책 수립할 때 그분들의 삶도 우리는 우리 정책의 목표에 넣고 가야 된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지도 당연히 통일정책·대북정책에는 포함돼야 되는 거지 북한 정권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면에서 통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 주민들의 그런 알권리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락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잠깐만요.

인요한 위원님께서 지금 도착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각각 다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차가 막혀 가지고 늦었는데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대한민국의 이익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 위원** 외교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NATO 회의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NATO 확대회의에 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 정도의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가는 길에 호놀룰루에 있는 인태사령부에 들려서 미군 지도부하고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북러 간의 동맹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NATO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하고 연대와 공조를 하는 모든 행동들이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군사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도 군사적 연대 강화 움직임을 축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소 냉전 시기에도 이런 식의 상호 간의 군사적인 움직임의 상승 작용이 서로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긴장과 위태로움을 야기하고 소모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 정부의 외교를 보면 전체적으로 단순한 사고, 대중적인 대처에 매몰돼 있지 않냐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외교의 옵션은 나날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통합되고 잘 조율된 미·일·중·러·북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외교의 현실을 잘 아는 외교부가 이러한 점에서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장관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 방미 일정을 조율함에 있어서 초점을 안보 측면에 맞춰서 일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와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하시게 된 것이고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력 강화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인태사령부를, 우리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태사령부를 우리 정상이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강력한

메시지 발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고 타이밍상으로도 저는 그것이 과도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다든가 러북 동맹에 대응한 우리의 맞대응으로서의 지나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성락 위원**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역대 장관 중에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에 도발을 이어 갑니다. 지난달에는 러·북이 사실상 동맹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이러한 입장으로 지난 2년간 대치를 했었는데 남북 간의 충돌이 없었다는 것이 특이할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지금 보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어지는 오물 풍선, 확성기 등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충돌이 큰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인 미국도 북한은 물론 우리에 대해서도 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본연의 노력에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통일부 내에서 통일담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이 나온 지 35년이 됐는데 이 방안은 7개 정권을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여야는 물론이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담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통일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쓰여 있지만 실상을 보면 야당이나 진보진영 인사하고는 거의 소통하지 않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만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통일부가 이러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입장으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편끼리만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장관께서는 지금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는 어찌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지금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다양한 정부에서 일하셨던 통일부장관분들이라든지 외교부장관 그런 분들도 제가 두루 만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그런 여론 수렴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통일담론 관련해서는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 시점은 분명하게 정해진 게 없고 앞으로도 계속 여론 수렴을 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들과 국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락 위원** 형태가 굳어지기 전에 국회하고도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위성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당연히 평화로워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민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지 누구에게 시혜성으로 혹은 굴욕적으로 구걸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조각에 불과한 조약 하나 믿고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외쳤다가 제2차 대전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 이어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서해에서 공무원을 납치하거나 소훼시키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북한 측에서 오히려, 조금 전에 다른 민주당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전투를 일으키는 도발적 행동도 매우 북한이 자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외교정책은 오히려 더 평화를 신뢰할 수 있는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지시하니까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웠던 대북전단 살포법을 만들어 댄다거나 또는 ‘특등 머저리’라고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비판했을 때에도 그것은 과감한 대화의 요구라고 남측에서 답변한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호구로 보여지는 것이어서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평화를 더 위협하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 청구도 못 하고 사과를 받아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서해 공무원이 납치·살해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하는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고 그 정책은 더 강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저의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핵 보유 찬성이 60.2%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월 달에 한국갤럽이 조사 발표한 것인데요.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무려 91%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72.8%, 약 73%가 됩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자체적 핵무장을 해야만 우리의 안전보장,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파파로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브 포워드(move forward)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 호주가 미국·영국·호주와 삼자 사이에서 AUKUS를 결성했을 때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키로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핵 잠재력, 핵추진잠수함, 때로는 우리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과 또 적절한 수준의 우라늄 고농축을 할 수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당장 눈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을 포기한다거나 중단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이 이와 같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파로 인태사령관의 언급 내용 중에서 아마도 앞부분의 발언만이 언론에 부각이 되고 그 양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작전 분석의 결과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아서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은 빠지고 아마 뒷부분의 ‘검토해 볼 수 있다’, ‘추진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만이 부각이 돼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핵 잠재력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기도 하고 또 자체 핵무장 문제는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NPT 체제와의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문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전략적 협력의 기회의 공간들을 좀 확보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는 작업부터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윤후덕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장관님은 접경지역에서 살거나 또 군 생활 했던 적 없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윤후덕 위원** 저는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대북전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빠져리고 있습니다, 빠져려요.

이제 대북전단 때문에 북쪽 이놈들이 오물 풍선 보내고 그리고 또 격화되니까 군에서는 또 확성기를 방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서해 NLL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것 겁나는 겁니다. 게다가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사상자가 발생하면 군에서는 그 지역을 조준 타격하겠다, 원점 타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일찍부터 풍선을 띄우면 조준사격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준사격을 상호 간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지전이지요. 상호 간에 원점 타격을 하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군사적으로 싸우는 거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5페이지에, 5페이지 좀 보십시오. 이 상단의 인도실인가 부서에서

관련된 단체의 그런 사람들을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불러서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대북 풍선을 조장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것을 걱정하면서 자체하라고 한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윤후덕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는 그런 판결의……

○**윤후덕 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는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상황 관리라는 것은 지금 군사적으로 긴장되고 있으니까 자체를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당부한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통일부에서 그 단체분들 만나서 자체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결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후덕 위원** 자체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체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가 그 단체분들을 만나서 상황도 설명을 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분들도 만나서 저희들이 상황도 설명을 하고 소통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해 나간 기록이 있어요?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하고 이런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한 실적이 있어요? 실제 누구 만났어요? 파주시민들을 만나 봤어요? 그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희들이 파주 쪽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가서 저희들이 소통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게 전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도화선이에요. 통일부장관이 이걸 막아 내야 돼요.

진짜 파주 한번 오세요. 거기서 나하고 간담회 합시다, 주민들하고. 거기서는 생존의 문제예요. 여기서 한번 조준 타격을 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파주 지역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김포도 마찬가지고 연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현장에서 통일부장관이 좀 경청해 주세요. 이것 심각한 겁니다. 내 얘기라도 좀 듣고요. 그래야 통일부장관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우려도 제가 잘 경청을 하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 접경지역의 주민들과도 앞으로 더 소통하고 접촉면을 계속해서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라든지 또 북한의 계속되는 그러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러한 오물 풍선을 살포해서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또 여타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함으로 해서 북한의 그런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장관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장관님, 프랑스 주재 북 대사관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일가족이 망명했다는 그게 지금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여러 가지 신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런 사실은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사실과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태호 위원**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도 포함해서…… 예.

○**김태호 위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쿠바 외교관에 이어서 또 다른 한 가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특히 엘리트들이, 북의 엘리트 외교관 출신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탈북 행렬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혹시 이상한 어떤 징후 같은 거하고 연계 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직 그렇게까지 드릴 말씀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엘리트 외교관들을 포함해서 상충부 인사들의 좌절감은 상당히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예의 주시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님, NATO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면 이번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태 4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NATO정상회의에 연속 3회, 3년째 초청된 이유는 인태 지역의 안보와 유럽 지역의 안보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NATO 회원국들의 믿음이 있고 또 그에 우리가 공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 안보의 연계성이라는

공동 인식하에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75주년, NATO 창설 출범 75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인태 4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합의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된 측면도 있고 그 기회에 발표된, 아까 말씀드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정상 레벨에서 발표했다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결국 우리가 활화산 위에 지금 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북핵으로 인해서. 이번에 핵 억지력을 문서화했다는 거, 평시·전시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건 그동안 한미 간의 위싱턴선언 그리고 한미일 간의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이번 NATO정상회의에서 이런 핵 억지력, 문서화, 굉장한 성과라고 보는데 지금 미 대선의 정국, 미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한미동맹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핵 억지력의 문서화까지도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미군 철수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양한 평가와 분석이 있고 심지어는 공화당 내 트럼프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통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대선 결과를 예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공조에 대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워싱턴조약에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실제 앞으로 지금 러·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리고 세계 무역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정책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 가능성에 트럼프 당선의 경우 많이 지금 예측되고 있고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공세, 공격적 공세에 따라서 우리 한중 간의 앞으로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 예측도 하고 사전에 어떤 형태, 정상회담이라든지 실무적 어떤 회담을 통해서 한중 간의 향후 어떤 대응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시나리오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한중 간의 대화를, 한미동맹의 동맹국으로서 한중 관계 대화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자라는 대화를 한다는 건 이성적이지 않고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한중 관계는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고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서 오는 파장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 그런 것들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질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요? 특히 북미 정상회담도 한반도에 상당히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이미 남북 간에도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서로 강대 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가자지구에 이어서 또다시 전쟁 위협 지역으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대북 전단이, 별것도 아닐 수 있는 이게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탈북단체들이 중심이 된 대북 전단이, 급기야는 북의 일곱 차례에 걸친 오물 풍선, 2400여 개의 오물 풍선이 우리 국회 까지도 떨어졌지요. 그렇게 되면서 남북 간의 새로운 도발과 충돌의 요소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우리 군과 또 국방위원회는, 이미 부양의 원점으로 황해도 13곳이 확인돼 있고 여기에 원점 타격을 할 방침이다, 물론 조건을 걸었지요.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조건을 걸기는 했습니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황해도 지역 부양 원점에 타격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혔는데 여기는 대체로 우리 DMZ도 아니고 최소한 10km, 15km 이상이면 이건 소총 사격이 아니고 포격,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상 전쟁 돌입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을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여정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별써 29개 대형 풍선이 또 발견됐다. 이제는 대응 방식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하라’ 이런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마 오물 풍선 이상의 더 강력한 대남도발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되는, 아주 뭐랄까요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 상황인데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특히 평화관리,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입장은 이것을 자제시키고 극복하고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장하고 도발을 촉진한다는 대응을 하고 있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은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더욱 강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발표를 하셨던데 지금 남북 간에 주고받기하면서 충돌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통일부의 이런 입장과 태도가 특히 장관의 입장·태도가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발적인 그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북한이 지난 4월 달에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서해·동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나 뼈라를 살포하는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딱 한번, 7월 3일 날 인권인도실장 주재하에 경찰청·국토부·국정원·국조실 관계자하고 회의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남북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전쟁을 촉발하는 사태에 제동을 거는 이런 대책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직무유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충돌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걱정스럽기 짹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좀 취할 걸 촉구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정부가 불필요하게 그 긴장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도 정부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이재강입니다.

장관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대회에 북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또 그 장소에 통일부 직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통일부장관 뭐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통일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출장자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참석한 공무원 명단과 일정을 공개하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관 정 땡땡, 심 땡땡, 이게 뭐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장관께서 이거 어떻게 모르십니까?

국회가 정부 부처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런 성의 없는 자료는 뭐니까? 정 땡땡, 심 땡땡이 뭐니까? 국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 공무원이 출장 다녀오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처에 제출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출장 다녀온 공무원들 소속·직위·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해당 부서에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를 오늘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대북전단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반복적으로 하니까 다른 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초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는 헌법 3·4조를 바탕으로 통일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강 위원** 또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한다는 말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강 위원** 북진이라는 말이 주는 섬뜩함이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데 북진정책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군사적인 북진이 아니고 자유의 북진이다. 이것은……

○**이재강 위원**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북진정책이 어떻게 자유의 북진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 주민들 개개인도 알권리라든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인권이나 안전 이런 것들이……

○**이재강 위원** ‘북진정책이 뭡니까?’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대북 선전·심리전을 강화시키는 것도 북진 통일에 포함됩니까? 탈북을 유도하는 것도 북진정책에 포함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정부에서 탈북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럼 그 통일의 목표가 혹시 내년 가을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거는……

○**이재강 위원**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보십시오.

천공이 정리를 딱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고 선포를 해놨습니다. 천공이 2025년 가을쯤 통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공의 2025년 가을 통일설이 나오고 몇 개월 후에 통일부에서 급작스러운 북진정책 추진이 나왔습니다.

다음 PPT 또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입니다.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래야 되고 남북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남북문제에 본인이 나선다고 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민간인들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부인과 가깝다는 의혹이 있는 천공이라는 역술인 유튜버입니다.

본 위원은 천공의 저 말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헛소리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천공의 2025년 통일 가능성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천공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강 위원** 그럼 2025년 천공의 통일된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도 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현시점에서 지향은 해야 되지만 그 시기를 예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은 천공에 대해서 부정을 못 하시네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통일정책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북쪽을 30여 번 다녀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유념해야 될 얘기인데요.

사실 서독·동독이 통일되기 전날에 교수들이 크게 세미나를 갖고 10년 내지 20년 후에 가능할 것 같다, 한 2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그다음 날 통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도사가 무슨 얘기한 거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가 통일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최근에 이번 총격사고, 뭐라 그러나요? 암살시도건 전에 제가 트럼프 책을 읽어 보기 시작해서 한 절반쯤 읽었습니다,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인데.

제가 장관님께 궁금한 것은 이제 트럼프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외교부에서 그런 데 좀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찰을 하고 있고 최근 인사들을 포함해서 공식·비공식 기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있고 또 재계의 채널 그런 것들도 함께 협의를 하고 있고 일일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정책의 동향이랄까 여러 가지 인맥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제가 수련을 뉴욕에서 해 가지고 뉴욕 사람들의 어떤 문화·성격,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책을 읽어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부동산업자더라고요.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완전히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그분의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 한국이 돈을 많이 벼는데, 제가 지금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이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왜 안보를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혹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비춰서 또 그때 얻은 교훈을 교훈삼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현직에서 유엔 대사로 경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또 판단과 관찰도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몰라도 이번에 만나고 와서, 회의를 하고 와서 동맹이 정확하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 한 마디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오늘 회의 모두에 여러 가지 핵 억제력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안보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른 국내 여론이 미 행정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작년도에 워싱턴선언도 발표가 됐고 이어서 핵협의그룹도 처음 설치가 되고 이번에 NATO 정상회의에서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도 발표돼서 명실공히 핵 기반 동맹으로 승격이 됐다 하는 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또 제가 이번에 차관 이후 10년 만에 워싱턴 가서 느낀 겁니다만 한국에 대한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걸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분야,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것이 명실

공히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질적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김현종 대표가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미사일 규제를 상당히 시원하게 풀었어요. 그때는 우리 당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태평양에서 일본하고 전투도 했는데 일본은 점령한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동맹이고 일본은 한 5만 몇천 명 가 있는데, 점령군이 가 있고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그런데 플루토늄을 보면 일본은 수백 개, 수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플루토늄을, 지금 핵 보유 문제는 아주..... 북한이 거의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에 대한 말씀 좀.....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답변도 제가 두어 번 걸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보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서 그런 걱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현실이고요. 또 그러한 목소리들이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 협의 때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계속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요한 위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좀 더 확실히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모든 가능성의,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기회의 공간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색도 하고 또 신뢰도 쌓아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다뤄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질의 이전에 짧게 의사진행발언할까 하는데요. 업무보고 이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직후에는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공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외교부 업무보고를 보는 과정에서 지난 국회에서 저희가 RCEP에 대한 비준동의를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외통위가, 저희가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발효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저희가 거수기 역할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잠깐 산중위 위원장으로 가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외통위에 관련된 보고들을 수시로 해 달라, 왜냐하면 RCEP 당시에 저희가 통과시키고 난 뒤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농해수위 위원 등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비준동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가 우리 상임위 소관 이외의 것들, 절차 과정 안에서 마지막 최종절차 이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외교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더라도 계속 팔로잉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또 부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산업부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관련된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아마 필리핀하고 FTA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정도에 이미 합의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허겁지겁 또 올라올 거예요. 오고 나면 저희 제대로 못 보고 또 급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좀 적극성을 띠고 우리 상임위가 관장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외교부장관님, 사도광산 등재 얼마 남지 않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재정 위원 지금 위원회가 21일부터 개최되고 나면은 항간에는 한 26일쯤 결정될 거라고 그러는데 지난 5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ICOMOS에서 어쨌든 우리가 강제동원 역사와 함께 기재하도록 했는데 군함도 사례만 보더라도 일본이 자발적으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신문들 보면 올봄에 나온 신문에도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산케이신문 보도가 있다든지 또는 윤덕민 대사가 니가타현 지사를 만나 가지고 한 얘기는 이전의 사례에 따르면 된다고 했는데 이전의 사례 군함도는 형편 없었거든요. 강제동원 관련된 거 기술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것도 1000km 떨어진 곳에다가 관련된 조치를 했어요. 이런 사례에 따라서 또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외교부는 충분한 노력해 주시고 사실상 결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처, 외교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예민하고 섬세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ODA나 다자 ODA 그리고 글로벌 보건협력에 관심이 많아서 소위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정치적으로 비하됐던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야당의 간사직을 하면서도 저는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금이 하자 치유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제안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외통위에 다시 와서 점검한 부분이 KOICA라든지 KF 관련된 공공외교 영역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PPT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OICA의 이사가 새로 선임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통상과 똑같습니다. 대사 출신 그리고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KOICA 내부에서 인정받은 분인네요.

네 번째 분, 손정미라는 분을 보니까 이력이 약간 낯설어요. 물론 그 역량을 제가 이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의 리크루트 절차들이 충분히 그 이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정미가 이분입니다. 혹시 아세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모릅니다.

○이재정 위원 KOICA의 이사까지 쟁여 아시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윤석열 파워 엘리트 263人'이라고 하는데 손경식 변호사 또 검사 경력, 대구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이 검사님하고 가족관계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의 의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지요. 통상의 이사님들과는 굉장히 낮선 경력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김건희 여사 모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법률대리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했고 기수로는 한 기수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회고록이 있는데 회고록 안에 보면은 '가정형편으로 1998년 검사직을 사직했을 때 윤 당선인이 휴가를 써 가며 멀리 있는 나에게 찾아와 말렸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를 보며 참 고마웠다. 언젠가 이 사람이 어려울 때가 오면 꼭 도우리라는 마음을 먹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제 의문은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려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이분의 채용 자체가 문제다라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분이…… 경력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경력을 보면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글로벌협력관, 겨우 한 7개월 정도인 데요. 그 정도 경력 이외에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충북도청의 외자유치팀장을 했다는 것인데 KOICA 이사직으로, 게다가 지금 조정돼 가지고 이분이 맡은 직은 실제 조달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또 업무분장도 됐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정말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파워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또 이분한테 배정이 됐는데 겨우 7개월의 경력으로 이렇게 임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그 직도 이분을 임용하려고 만들었대요. '지금 어느 분이 근무하시나?' 물었더니 지금은 공석이래요. '왜 공석이냐?' 물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그런 자리 만드셔서 그 경력 베이스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KOICA 상임이사로 오시고 상임이사에서 조달 관련된 업무를 새로 분장해서 맡기까지 하시는 이분, 역량 있는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트 과정에서 함께 응시한 분들 요청드렸더니 어떤 자료도 못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역량 있는 분 뽑았다는 것을 일 시켜서 보고 싶지 않고요. 그 선출해 내는 과정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국회를 조금 납득시켜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정말 '만사영통'이라는, '만사 영부인 통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적 인간관계가 또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친 건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명을 서류에서 선정을 했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걸려서 20명을 선정하고 면접 과정에서 10명을 다시 걸려서 10명 중에서 KOICA 이사장이 2명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과정에 대한 납득이 어렵습니다. 설명 필요한 자료,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교부에서 주관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KOICA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자료를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답답하네요. 물을 건 열 가지도 넘는데 5분밖에 안 주셔서 여전히 답답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준형 위원** 통일부장관님, 계속 현재 결정을 좀 왜곡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입법 취지는 이미 있는 법으로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그걸 하고 있는데 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계속 현재 결정이 마치 전단을 못 막는 것처럼 지금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계속 주장하시거든요.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이해하는 바는 현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게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됐습니다. 장관님,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고 알고도 모른 척하시는 건지 좀 겪어 보면 알겠지요. 나중에 계속 묻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작년 11월 9일에 나와서 어느 위원께서 묻는, 접경지역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가셨습니까? 거기 가서 보셨습니까?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6월 27일 날 연천에 담당과장 보낸 게 다입니다. 왜 그것 해 보신다고 하시고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안 가셨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접경지역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경찰 측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준형 위원** 장관님께서요, 토크쇼를 그간에 13회 하셨어요. 그리고 비공식 강연은 수도 헤아릴 수 없고 안 밝힙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에는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토크쇼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수억 원을 쓰는 강연을 영상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취임되기 전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셨던 분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왜 동영상이 없습니까? 이것 공식적으로 요청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개황이 2023년 3월 15일에 급해서 임시본으로 발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보완본을 만들고 계신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개정본이 발간됐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아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걸 쑥 빼 버리면, 우리가 보통 임시본을 한다면, 그리고 임시본을 한다면 급해서인데 급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나중에 보완을 한다며 뺀 건데, 확대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1년 이상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보통 1년에 한 번씩 개황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일에 앞서서 아마 방일용으로 요약된 책자를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 방일용으로 일본의 눈치를 본 거네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뭐……

○김준형 위원 그걸 왜 뺍니까, 그런 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사도광산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엑스포 실패에 대한 평가를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미 많은 부분을 했고요.

○김준형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진행되는 보고서나 평가나 회의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준형 위원 외교부가 엑스포 결정 득표 전에 판단한 것이 우리가 결선투표에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보내신 적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내부 보고서 말씀이신가요?

○김준형 위원 예.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을 지금 내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준형 위원 예, 그 평가를.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경쟁 유치국도 있고 관련 교섭국이 있는 것인니까……

○김준형 위원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교 교섭에 관한 사항인데 그걸 대외에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준형 위원 장관께서는 지금 워싱턴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개입하는 결기정사실화 하는 담론을 알고 계십니까, 전직 장성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담론이 그렇게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의 의견은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한미군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저는 대만 유사시에 한국 개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겠습니다.

외교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수미 테리의 간첩 사건에 기소된 사실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봤습니다.

○**김준형 위원** 저도 이분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은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면서 이 사람을 간첩 행위로 하는데 우리 정부는 NSC에서 도청했던 문제도 하나 항의하지 못하는 게 우리 정부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의한 적 있습니까? 여전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원칙적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조정식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문제 좀 짚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워낙 지금 남북 갈등의 가장 현실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통일부가 남북 간 평화를 관리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부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북전단 문제는 지금 남북 평화 관련 시금석이 돼 있어요.

지난 일요일 날 북한의 김여정이 굉장히 세계 비난을 하면서 이제는 아예 오물 풍선을 넘어서는 다른 대응을 시사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하게 상황들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지난 6월 11일 날 갤럽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0%가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응답보다 2배가 높아요, 30%. 갤럽에서 한 조사에요.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이럴 정도로 국민적인 현안과 관심사가 이슈가 돼 있어요. 실제로 북한의 오물 풍선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또한 동시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그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냉정하게 보고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해 왔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렇지요? PPT 지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4월 이후에 7월 1일까지 다섯 차례 만났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두 차례 만나기도 했고 대표적인 단체들을 죽 만나 봤어요. 민간단체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무슨 얘기 나눴나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정부의 정책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단체들의 활동 그다음에

정부의 상황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조정식 위원 의견을 교환했나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조정식 위원 자제해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방조했어요, 아니면 독려했어요? 의견을 어떻게 교환했나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단체들의 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조정식 위원 다음 PPT 좀 띄워 보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올해 6월까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총 스무 차례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6월 말까지 아홉 차례 살포를 했어요. 올해의 경우에 통일부가 4월 18일 날 아까 PPT 보셨겠지만 기독북한인연합을 만났는데 그 단체가 만난 이후에 4월 25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을 만났어요. 박상학은 그 이후에 6월 5일, 6월 20일 두 차례 대북전단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노체인·큰샘이라는 단체를 또 만났어요. 그 단체도 6월 22일 날 직후에 살포를 했습니다.

도대체 통일부가 뭐 하는 겁니까? 평화를 관리하는 통일부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 단체에 바보 취급당하거나 아니면 방조하거나, 독려하거나 그중의 하나입니다. 뭐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와 이 단체들의 면담 이후 이 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장관님, 그 단체들과 만난 결과보고서 있지요? 면담 결과보고서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있을 것입니다.

○조정식 위원 제출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조정식 위원 외통위원 전체한테 그 결과보고서, 제가 일부를 갖고 있거든요. 제출해 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그 단체가 통일부를 만나서 ‘풍향이 맞을 경우 언제든 풍선을 날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야간에 전단 살포하려고 한다. 살포할 때 언론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며 가급적 비공개로 활동하고자 한다. 남풍은 봄부터 가을 까지 집중되어 있어 남동풍이 불 때는 두 시간이면 평양에 도착 가능하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조정식 위원 이게 뭐니까? 이것 가만히 둬야 됩니까? 구체적 살포 방법과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끄덕끄덕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단체들이 보란 듯이 통일부 만나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단을 살포했어요. 그 단체들이 통일부가 자제하라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 얘기 잘 들어 주고 통일부 접촉하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통일부 뭐 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실제로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한 단체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의 헌법재판소 제소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그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석기** 우리 조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제가 자료 신청에 대한 확인 때문에 그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자료?

○**조정식 위원** 자료 요청. 왜냐면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간단하게 1분이면 돼요.

.....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대북전단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통일부 인권인도실에서 실장과 그다음에 정책관 등등이 접촉을 죽 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면담 결과를 아까 제출해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만난 일자와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어느 단체 누구를 만났는지 그 단체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 통일부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장관께서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여야 모든 위원들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일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단체들은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통일부에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요청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아까 제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다르게 얘기합니까? 그것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왜 또 지금 말이 바뀌어요?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그건 이제 다음 질의를 계속 하시고 또 우리 간사 간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차지호 위원** 앞서 여러 가지 첨예한 사항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아마도 장관님께서 북한인권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과 중요성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보고에서도 상당 부분이 북한인권 문제로 돼 있고 김건희 여사님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아마 통일부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부의 중점 정책 사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있고 생명권·건강권을 위시한 사회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합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다,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당연하지요. 이 두 가지 권리 모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건강권 침해는 사실 실제 일을 해 보면, 저도 지난 20년간 인도주의 활동가랑 인권활동가로 일했었는데 더 직접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나라가, 북한뿐만이 아니고 국가가 기능을 잃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실제로 정치적·시민적 권리 침해로 죽는 사람들보다 수십, 수백 배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시스템 붕괴나 건강권의 침해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묻겠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하는 억제, 압박, 고립을 초래하는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 내부에 방금 말씀하시는 생명권이라든지 건강권 이 문제는 외부적인 그런 요인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 체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건의료시스템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국가도 이 정도의 대북 압박 정책이 이루어지고 경제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의료시스템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시스템 또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한 의료시스템과 아니면 북한의 생명들에 얼마나 많은 손실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지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지호 위원 왜 인권을 중시한다는 분이 사람들의 생명,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희들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북한의 무상의료 체제가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 그리고 고립으로 시장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북한이 이런 경제 제재나 대북 압박 정책이 계속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외치고 강연을 다니시면서 실제 북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왜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통일,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이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살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님이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그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게 북한 주민이 그렇게 어려운 정권에 처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의 기본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차지호 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시고 정책적인 준비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대북정책의 중심이 되는 이 대북 압박 정책들이 어떤 인명 손실을 만들고 있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확인된 바에 따르게 되면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을 북한으로, 방북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호 위원** 아니, 장관님 ‘병 주고 약 주고’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죽고 식량이 없어서 접근성이 안 되고 그리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환경들이 앞으로 남북통일에 굉장히 큰 저항이 될 거라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왜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대북 압박 정책을 하는 와중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권을 중시한다는 장관님의 발언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 내부의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가적인 자원을 왜곡 분배하는 그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지호 위원**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그 생각에 대한 근거를 가져다 주십시오. 의원실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 파악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인권을 존중하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차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지난달 25일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신임 인권위원회 공모 관련해서 지원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저희가 확인됩니다. 이 관련한 자료를 오늘 전체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정애 위원**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낸 서한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서한……

○**한정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통일부장관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한정애 위원 오늘 답변을 죽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암울하다는 생각을 많이하게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어제 있었던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과격한 단어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오물 풍선을 서로 살포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 9일 날 우리가 먼저 보냅니다. 4월 23일 날 또 보냅니다. 5월 10일 날 보냅니다. 그랬더니 북에서 또 보내지요. 1차로 5월 28일에서 29일 그리고 2차로 6월 1일에서 6월 2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났더니 6월 5일, 7일, 8일 우리가 또 보냅니다. 보냈더니 3차로 또 북에서 보냅니다. 3차, 4차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6월 20일, 21일, 22일 우리가 또 보냈고요. 북에서도 또 보냅니다.

이번에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한 내용, 여기 들어가 있는 USB를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르고 봤겠지요, 뭐가 들어 있는지. 봤는데 언론에 따르면 한 3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방식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원래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사람의 목숨을 그냥 끊어 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현법재판소 결정문 자꾸 얘기하는데 현법재판소 결정문을 요약하면 이렇지요. 이은애 재판관 등 4명은 '전단 살포 금지에서 더 나아가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도하다.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 4명은 정확하게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했고요.

유남석 재판관 등 3인은 '형벌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살포 행위 이전에 이를 신고하게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원래의 목적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의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김기영 재판관 등 2명은 '위헌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4 대 5로 보면 정확히는 기준에 있는 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거지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비행금지구역 표시입니다.

어떠한 형식의, 초경량비행장치도 금지가 되는 구역입니다. 휴전선 이남, 흔히 말하는 접경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 없이 비행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는, 그냥 풍선에 매달아서 보내는, 지금 보내고 있는, 대북전단 업체들이 보내고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P-518에 해당되는 휴전선 지역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서울 도심은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여기는 수도

방위사령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경찰청도 비행금지구역 관련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하늘을 위해서 경찰이 함께합니다’, ‘어겼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아래 지역은 비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휴전선과 원전 인근은 반드시 비행금지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앞의 해당되는 기관에 비행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도 비행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단체들이.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합동참모본부에.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전단을 달아서 보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하세요’라고 안내도 합니다.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날립니다. 이것 불법인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자꾸 장관께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데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승인을 받게 해야 되는 거지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승인을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좀 하십시오, 통일부장관이. 일을 안 하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인인 대통령 배우자가 대북 문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이러잖아요. 이미 기준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막을 수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하시는 겁니까? 국방부도 놀고 있고 경찰청도 놀고 있고 통일부는 ‘하세요’, ‘하세요’라고 하고 있고. 일을 하십시오, 일을.

○위원장 김석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저도 방금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통일부의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죽 기록돼 있다 하셨는데 아무리 읽어 봐도 통일부가 정부조직법상의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태도를 보면 꼭 국방부장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희가 통일부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통일부가 5월 28일 이후에 대북전단 자체 요청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전단 살포를 자체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북전단 자체 요청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장관님은 대북전단 자체 요청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어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홍기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을 심각한 도발행위로 생각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남쪽에서 대북전단 풍선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것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홍기원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주장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김여정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쪽에서 대북전단 풍선이 오기 때문에 오물 풍선을 보내는 거고 최근에는 ‘더한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것은 북한의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서 그 북한의 주장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북한은……

○**홍기원 위원**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북한은 명확하게 그리고 날짜상으로 봐도 우리가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면 그에 대응해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고 또 김여정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북전단 풍선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 안 하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서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는 게 위험하다고 인식 안 하시는 거냐고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간단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상황은……

○**홍기원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은 국제협약 그리고 국내법에 명확하게 위배가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이 문제는 통일부 소관은 아니고 다른……

○**홍기원 위원** 대북전단 풍선이 통일부 소관이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아니요. 민간항공협약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홍기원 위원** 대북전단 풍선이 통일부 소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당연히 통일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홍기원 위원** 풍선을 보내는 행위가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위반된다면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지 그 법이 통일부 법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원 위원** 국제민간항공협약,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인데 여기에 따르면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는 것은 명확하게 협약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홍기원 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물잖아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른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데 국토부에서 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제가 국토부하고……

○**홍기원 위원** 협의하시겠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홍기원 위원** 협의하실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확인해 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국방부에서 행정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예요. 지금 대북전단 풍선을 많이 날리는 파주, 김포, 강화는 다 이 규정상의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은 명확하게 법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데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취하세요? 통일부장관이라면 ‘전단 풍선 날리는 것은 명확하게 국내법과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에 위반되는 거니까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홍기원 위원**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제가 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군 쪽의 P-518 이 문제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기원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 지침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풍선 날리는 것은 위법이다, 불가피하게 날려야 된다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확인하시고 협의하시고 조치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는 따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 간사 두 분이 남았는데요. 우선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제가 한 20년 전에 북경에 근무했습니다. 북경에 근무하는데 그때는 중국도 ‘평화적으로 발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도와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서 그때는 저희 입장이라는 게 균형자라든가 촉진자라든가 어떻게 표현하든 미중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잘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어서 양국으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아주 타당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십수 년 동안 국제정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구조적인 변화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투키디데스 트랩(Thucydides Trap)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전이에 의한 갈등, 두 번째는 안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술패권 경쟁,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이런 세 가지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미중 관계가 갈등 상황으로 바뀌면서 중국은 자기들은 할 일은 하겠다 하는 유소작위로 돌아갔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이 중러의 연결고리가 되겠다든가 촉진자가 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불신을 사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는 약한 고리로 인식되면서 압박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 정부 때 제가 많이 겪었던 현상이었고,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지를 조정하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기초해서 우리는 자유민주국이고 우리와 정체성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 기초하에서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 국가니까 호혜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 호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로 지금 관계를 조정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약간 거기에 중국이 적응을 못 해서 뭐랄까, 겉으로 볼 때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비치는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조금씩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서 북경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위해서 오기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찰하고 똑같이 생각……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체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이후 몇 달 동안 중국과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바도 대충 비슷합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 엑스포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를 모시고 카리브해 국가에 유치 교섭을 갔는데 이미 사우디가 다 쓸고 간 뒤였습니다. 카리브해 국가에 대해서 먼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늦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2021년 6월에 우리가 유치 신청을 했고 그것이 지난 정부의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위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인선하거나 이런 것이 한 10개월이나 11개월이면 정부가 바뀌고 다 새로 인선

해야 될 거라서 그런 것을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년의 기간을 골든타임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놓쳐 버렸습니다. 그걸 놓치게 돼서, 그다음에 뛰어드니까 이미 사실은 사우디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뛰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정부의 변화라든가 정치 일정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요.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주무부처가 통일부가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국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니까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안 좋은 영향을 차단하고 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아까 장관도 잠깐 답변하셨는데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국제민간 항공협약 말고도 국내법에 항공안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129조에 보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난리고 파주 주민들을 비롯해서 막 원성이 자자한데도 통일부는 이 항공안전 법에 이게 위배되는지, 국토부가 허가를 해 줬는지,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공문 이런 것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 부분은 통일부에서, 국토부에서……

○**김영배 위원** 없으면 이런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도 통일부가 자기 직무를 하지 않았다, 즉 직무유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김영배 위원** 유념이 아니라 직무유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가 다른 부처와 잘 협의해서……

○**김영배 위원**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직무유기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경직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위해를 당하거나 할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직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통일부에서 경찰청에도 한 번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적이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주무부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심지어는 관련 단체를 만나 가지고도 오히려 용인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을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직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것 감사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찰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경찰청과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영배 위원 실무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하고. 제출하실 수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출하실 수 있지요? 회의 일정 그다음에 참석자, 회의 내용, 안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차피 다 이것 국정감사 때 합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실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가서 살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핵무장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NPT를 탈퇴하면 IAEA에서 제재가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영배 위원 안보리 제재가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NPT 위반을 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탈퇴를 하면요.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나서 어떤 제재들을 받았는지 잘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탈퇴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이지요, 탈퇴 그 자체 때문에 제재가 아니고.

○김영배 위원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을 하니까요.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도 NPT를 당연히 탈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안보리의 제재를 받게 되겠지요.

자, 봅시다. 1차 핵실험을 했던 북한이 06년도부터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경제 제재와 각종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유엔 협약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경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 그러니까 항공부터 시작해서 선박, 모든 걸 다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결은 안보리에서 합니다.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영배 위원 대한민국은 수출 통상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출 아니면 못 먹고살잖아요. 그런데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아까 답변에 경제비용 얘기를 말씀드린 게 다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핵무장론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다시 해 보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현재 핵 억제 강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즉 핵무장론은 반대한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은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체로 거기에는.....

○김영배 위원 정부 입장이 아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무장이 적절한 답변은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 위원 정부 입장이 아니다? 정부 입장이 아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부는 핵무장 입장이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약 3시간이 다 돼 가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권칠승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잠깐 질의 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북한의 정의에 의하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휴전 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일방이 타방에게 전단을 보내는 것, 전단이라고 하는 게 옛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베트남

전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유력한 심리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권칠승 위원 이게 전쟁의 수단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과소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실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권칠승 위원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최근에 라인야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날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하나 제출했는데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내용만 들어서요 보고서 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개요하고 다른 의견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순차적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네트워크 등등 이런 기술적 관계를 다 종료하고 보안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일본에서 완결한다 이게 큰 틀의 내용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고를 받으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에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자본관계를 재조정하는 것 이거였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권칠승 위원 그런데 자본관계를 단절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 문제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검색을 해 봐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최근 일본 총무성의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보안 문제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일본이 이 보고서를 억셉트(accept)했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제가 해석하고……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자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사실 중간적인 문제고 궁극의 문제가 바로 기술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중소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외주했다가 그 외주된 것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다 탈취하는 거거든요. 거의 유사한 지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일투자협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한일투자 협정 이런 것들을 감안한 어떤 기술이 있는, 열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의 퀘坎坷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한번 되돌아

볼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외교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장관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명확하게 위헌법률이라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우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서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김여정의 하명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결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알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공개처형한 정권이 잘못입니까, 그것 본 학생이 잘못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것은 정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도 임영웅 노래도 듣고 싶고 나훈아 노래도 듣고 싶고 또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고 싶은데 그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말살해도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현 위원 거기에 1달러 지폐도 넣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장마당에 가서 먹고살기 위해서 1달러를 들고 가서 자기 음료·식품을 구입해야 될 권리가 북한 주민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게 되면 그런 활동의 공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북한 주민도 명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우리 헌법상.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데 그것을 방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말살되는 사회에 살아도 된다, 미래가 없는 사회에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지금 리얼규 참사라고 주쿠바 주재 참사관이었던 모양인데 이분이 말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한국에 살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암담한 미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남측의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통일을 더 갈망한다, 자식

들이 더욱 나은 미래의 삶을 살려면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열망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은 점점 더 높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구에서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생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전단을 살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민간단체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 위원** 지난 2년간의 정부의 외교를 살펴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한 점은 물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을 보면 한러관계·한중관계가 수교 아래 최악이 되고 남북관계가 극도의 대립 속에 있고 북 핵·미사일 위협도 최고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방조 내지는 후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네오콘식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이 단순하고 치우친 판단에 따라서 정책을 주도한 데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윤 정부는 중요한 외교정책을 야당과는 일체 소통 없이 혼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외교는 옆도 뒤도 안 보고 직진하는 거친 모습입니다.

한국이 처한 복잡한 지정학과 한국이 가진 주요 외교안보 어젠다는 우리로 하여금 사려 깊고 세심하고 또 통합되고 조율된 외교를 요구합니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외교 현실을 잘 아는 외교부가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전단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계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현재 결정의 취지를 다시 보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되면서도 또 국민의 신체·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남북한 긴장을 완화해야 될 또 다른 니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관청의 역할입니다. 저도 그런

현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뒤늦게 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장관님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지 마시고 현재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순서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은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그냥 심리전을 지휘하시는 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는데 현재 판결을 왜곡하는 일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저는 최근에 한중일도 하고,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작은 조정에 대해서 크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유사시에 한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것을 밝혀 주셔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의 몇 가지, 아까 개황 문제는 장관께서 외교백서하고 헛갈리신 것 같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비정기적으로 하게 되고 정권이 바뀌면 한 번씩 주로 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맞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약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발간된 게 3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것만, 과거사만 썩 떨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 50페이지라든지 30페이지면 모르겠는데, 그 설명이 부적합하거든요. 한 번 더 보충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 꼭 그 부분만을 일부러 빼려고 뺀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어디 순방을 하게 되면 항상 요약본으로 뭘, 이번에 NATO 갈 때도 NATO 길라잡이라는 그런 요약……

○김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요약본이면 삼백몇 페이지가, 주로 300페이지 중반대가 되는데, 한 50페이지로 했다면 말이 되는데, 그 부분만 요약이 됩니까, 다른 부분 그대로 다 가는데? 그런 요약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가지고요.

이 수미 테리라는 분은 오늘 뉴욕타임스에서 단독으로 나왔고 사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수년간 미국의 정보부, FBI와 CIA가 추적을 했고 이분은 사실 한미동맹론자이고 보수적이고, 제가 많이 만나 봤지만 완전히 저랑은 반대의 입장을 가진 분인데 미국이 왜 이것을 터뜨릴까요? 한미동맹이라는……

저는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저는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보와 보안은 동맹국이라도 그리고 이분은 공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공직을 떠난 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거의 간첩 혐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NSC에서 도청받는

것을 미국도 부인하지 않았고 그 증거 문서까지 왔는데 우리 안보실에서는 미국이 좋은 의도로 했다는 어이없는…… 그 이후에 보강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장관님한테 외교부의 시선으로, 전문가의 시선으로 용산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모든 사안을 긴밀히 소통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나중에 더 추적해서 꼭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오늘 전단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렇습니다. 들어 보니까 전단을 날리면 북한이 반발하고 오물 풍선을 보내니 긴장이 조성되고 우리 국민들,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걱정하시는 건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한 90년부터 남북회담 때마다 북한이 주장했던 요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해라, 전단·빼라 날리지 마라, 국가보안법 폐지해라였지요.

제가 똑같은 것을 한번 통일부장관께 여쭐게요.

우리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반발하지요. 단거리·중거리 쏘고 핵전쟁 불길 속에 몰아넣는다, 크루즈를 한다, 방사포를 쏜다, 우리 국민들 불안해하시지요,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뭘 했더니 북한이 반발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미훈련을……

○**김기웅 위원** 계속해야 되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똑같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대통령께서 했더니 또 북한이 한미동맹 강화한 것이 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전쟁이 어떻고 도화선 얘기하면서 또 반발을 하지요. 또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면 외교부장관님은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닙니다. 당연히 더 강화해야 되겠지요.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를 판단할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물론 고려해야 됩니다. 중요한 요소지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만으로 판단하는 건 오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정책적 목표,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북한이 반발한다고 안 합니까? 한미동맹 강화해야지요. 북한 반발해도 해야지요, 나라를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북한이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고, 국민이 걱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되고 우리 정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 혹은 필요치 않느냐, 너무 과도하냐 이것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얘기하시는 데 국민 걱정, 뭐 법이……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앞뒤가 바뀐 거예요. 물론 고려해야 될 요소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단을 날리는 심리전이 필요한 거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거냐, 바람직한 거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뭐 북한이 반발 한다, 긴장,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질의 다 끝났습니까?

○김기웅 위원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자료 좀 올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지도 보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이건?

○외교부장관 조태열 독도 관계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지난 금요일 날, 6일 전에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를 발간했어요. 그 책의 265페이지에 이런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땅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이런 지도를 제시하면서 자기들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키고 이것을 자위대가 지켜 낸다고 이런 책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간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이.

이거 외교부가 어떻게 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아태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불러서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대사도 아닌 공사를 불러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매년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수위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위를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장관님, 좀 그렇다, 좀 약하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방위백서·외교백서에 항상 독도 영유권, 부당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엄중하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업무현황 보고의 8페이지 하단을 좀 보십시오.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후덕 위원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 이

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뭐예요? 대사도 초치 못하고 공사관 초치 해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말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말로 아니면 어떤 걸, 외교 상황에서 말로 해야지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단호한 대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외교부장관 조태열**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그냥 언급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를,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뭔가 세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한미일 군사연합 이런 거 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이런 데서라도, 동해상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오지 못하게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강한 대응을 해야지, 계속 일본은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역대 모든 정부가 지금 하는 듯이 대응해 왔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단호한 대응이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 땅을 저희 땅이라고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이상 정확한 스테이트먼트(statement)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주 강조하고 다녀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아니,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런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요.

2019년 7월 1일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중요한 소재를 수출 규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희 집사람을 자기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때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외교부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이 저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게 최상의 대응이라는 얘기네요. 제가 답답하네요.

○**위원장 김석기**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 직무 중에 외국 정부나 외국인 등에게 선물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선물이 시가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여기는 장관이나 외교관이나 배우자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해임 또는 징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럴 것으로 봅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외교관이 직무적 관계가 있는 자문사로부터 700달러 상당의 야구 관람권을 받아서 이게 문제가 돼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최근에 징계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용선 위원 미국대사관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관련 사항은, 저는 개인정보에 관한 건 민감한 거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700달러면 한국 화폐로 보면 약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이용선 위원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해당 외교관이 경징계를 받았는지 대사관에서 여전히 같은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왜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알려지면 개인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700불을 받아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징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할 정도로 가벼운 징계 사항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감사관실이 엄중한 조사를 해서 취한 조치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김건희 여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대통령 직무 관련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6월에 국민권익위가 그런 유권을 내려서 상당히 지금 논란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또 180만 원 상당의 향수 등등도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 외교관이 약 1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선물을 받아도

그렇게 가벼운 경징계로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가벼운 징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럼 해당 직무에서 지금 아마 징계 의결 절차가 한 달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사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걸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징계 조치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요. 가볍지 않은 징계를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제가 경기도평화부지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좀 아십시오. 공부도 좀 하시고.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이재강 위원** 왜냐하면 2020년 6월경에 저희들이 사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항공안전법, 폐기물법, 9개 법을 동원해서 경기도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맞는 위험 지역을 선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 대북전단이 한 번도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일개 평화부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훨씬 높은 직급에 있고 권한도 있는 통일부장관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무를 방기한 것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강 위원**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때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빼라를 금지하는 그 내용이 없었고 그 이후에 또 법안에 들어갔다가……

○**이재강 위원** 그 이후 이듬해 1월에 남북관계발전법 그 법에 의해서 전단 살포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더 하시고 임무를 방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 좋아하시니까, 대한민국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 140만 명이 동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는 다섯 가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쟁 위기 조장: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 매우 큰 사유입니다. 청원서에서 ‘대통령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음,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이 대남 위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런 조치는 응당한 조치라고 보고 그것은 탄핵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위헌입니다, 위헌. 66조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대북전단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저는 일관되게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한 그러한 기본권에 관한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잠시만요. 헌법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것이고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은 평화적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국민이 부여한 평화통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통일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강 위원** 제가 그런 통일부장관 자리에 있으면 사퇴 벌써 했습니다. 사퇴를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재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대북제재에 있어서 통일부장관님 저는 인도적인 지원을, 우리 당은 강경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 정권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너무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국민이 못 먹는 것도 저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제재를 보면, 유엔제재를 보면 세 가지밖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농업 지원 그다음에 약 그러니까 의료 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식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통일부에서 원래 유엔의 원칙이 정치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섞지 말라,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랬는데 통일부에서 혹시 이런 인도적인 지원의 계획이나 힘을 쏟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인 지원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도 지금 국제기구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제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제기구의 그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요한 위원** 우리 재외동포청장님의 질문을 너무 못 받아서,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한 말씀 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 **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으로써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도 재외동포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을 잘 보살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그것이 지금 다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 특히 외통위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인요한 위원** 꼭 기억하겠습니다.

○ **재외동포청장 이기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기** 인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정 위원** 통일부장관님, 그냥 하나만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지금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난 거 이야기하는데 그 위헌판결, 구체적인 내용 보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라고 일괄해서 특정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그런 공방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게 문제 되기 전에 2020년에 국무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NED에서요 칼 거쉬먼 회장이 뭐라 그랬느냐면 대북전단 살포는 지금 바람이고 뭐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분이 언급한 거는 ‘효과적인 정보 공유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난 뒤에는 진짜 편 먹기 싸움처럼 되어 가는 국면이 있지만 과연 정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 싸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점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이 법안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엊그제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 **이재정 위원** 일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 통법화되는 거 비단 청와대발이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정부발로 자꾸 통법화되는 것 같아요. 비준 동의할 때도 임박해 가지고 외통위에 가져오고 심지어 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이 기금을 폐지한 외교부의 결정 때문에 국회는 빨리 이 허울뿐인 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 절차 하기 싫어요. 국민의 대표로 뽑힌 저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고 싶었습니다.

질병퇴치기금, 1만 1000원 출국납부금 중에서 7000원은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가고 1000원이 질병퇴치기금으로 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비행기 이용량이 줄어들면서 대통령께서 공언하셨던 글로벌펀드에 저희가 부담할 자금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공자금 대여를 통해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야당 위원인 제가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그런 정치 공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저는 인식해 드렸는데 지난 3월 갑자기 대통령께서 부담금 전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목표는 뭐냐면요 ‘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부담금입니다’ 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질병퇴치기금은 유지가 돼야 돼요. 오히려 굳이 따지면, 저는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문화관광개발기금이 부담금으로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질병퇴치기금은 사실 필요한 거지요.

심지어 외교부도 2023년도 9월 달에는요 오히려 국외 사례 프랑스와 견줘서도 적다고 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저는 최소한, 좋습니다. 기재부에서 얘기해서 일반예산 편성하여 주겠다고 하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상력도 발휘를 했었어야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의력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이 2.5%, 2.6%를 차지하는 게 항공기 운항이라면 기후변화기금으로 질병퇴치기금을 전용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창의력을 보태서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에 그저 일반예산으로 얻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편의성에 기대 가지고 기금을 폐지해 놓고 대통령이 부담금 검토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일빠, 그렇게 해서 나서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리고 국회에 물었다면 저는 이런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고 보다 공적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외교를 위해서 쓰일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 다 하시고 내가 봐도 부담금을 용당 부담해야 되는 행위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폐지한 다음에 국회에 법 폐지해 달라. 저는 향후 진행되는 일정에도 얼마나 공감되는지,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ODA 예산이라는 건, 공적 원조라는 건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질병퇴치기금 부담금, 국민에 세금 이외의 부담을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기재부 같은 데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부담금을 줄이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거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 ODA 예산으로 흡수해서 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재정 위원 그 부담금 자체, 1000원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기금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등등 외교부로서는 확보가 돼 있는 거를 굳이 포기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했느냐는 거지요. 가뜩이나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공공예산을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고 그거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부과 목적과 대상 간에 관련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너무 안이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국회하고 상의했으면 저희가 지혜를 더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회를 통법화시키는 일은 정말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회를 통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저희도 뼈를 깎는……

○이재정 위원 껍데기밖에 없는 법이니까 폐지해 달라고 갖고 오실 거잖아요. 우리는 심사에 어떤 의견도 못 내고 폐지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통법부지 뭐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나 조세원칙이라는 게 또 있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추가질문으로 원래 질문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오물 풍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한 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국내의 현재 판결이나 국내법들이 북한 쪽에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면 표현의 자유 얘기하시는데 대북전단 풍선을 보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대물 오물 풍선을 북에서 남쪽으로 보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북에서도 민간인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그건 표현의 자유입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에서도, 우리 현재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시됐다고 하면 북에서 민간인이 오물 풍선을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보냈다 그럼 비난할 수 없는 겁니까? 사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인권 문제 얘기하셨으면 남쪽의 표현의 자유가 중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북쪽에도 표현의 자유가 중시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마찬가지로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분쟁이나 갈등은 어느 한쪽에서 옳음을 강조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갈등을 줄이고 갈등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려면 양쪽의 상황들을 같이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별씨 1분 30초를 썼네요.

이 얘기를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변화, 지정학적 패권 경쟁·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넥서스(nexus), 공급망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지금 복합·연쇄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중복합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다중위기에서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초래되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초연결화되는 사회에서 한 지역의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연쇄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차지호 위원 글로벌 대전환기 다중복합위기의 시대적 상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물론 안 좋아합니다.

○차지호 위원 그렇지요?

외교의 역할이 전쟁 가능성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려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줄여야지요.

○ 차지호 위원 그러면 외교부의 정책이 전쟁의 가능성은 높이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은 무슨 외교적인 정책을 취해도 전 세계 분쟁 위험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한반도만 관리해서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폭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를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들을 운운하는 거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분쟁 가능성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시기이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NATO를 가고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이 계속 강화되면 우리의 기본 입장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무기 공급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차지호 위원 그러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정책이 북한 국민의 뜻이 아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 외교부장관 조태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게 북한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요? 북한 정부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지요.

○ 차지호 위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들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정부가 책임을 맡고 정책을 내리지 모든 결정은 국민들하고 합의해서 합니까?

○ 차지호 위원 전쟁 같은 상황은 그렇게 정치적 엘리트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외교부면 국민들의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조를 하고 강구를 해야지 국방부랑 어떻게 정책 기조가 비슷합니까?

○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억지가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기 차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사용후핵연료 포화도가 점점 높아져서 지금 거의 다 포화시점입니다. 2030년부터 하나하나 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후핵폐기물을 더 많이 생기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사용후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중간처리시설을 새로 짓습니다, 저렇게 한빛본부·고리본부·한울본부에. 그러니까 원전을 확대하는데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그냥 쓰레기장을 더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에도 핵을 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슴으로도 핵 쓰레기를 더 많이 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실제로 핵을 갖고 있는 프랑스, 영국, 인도, 러시아, 중국은 재처리하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로 일본 등 한 여섯 개 국가가 있습니다.

습식은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연구하고 있는 건식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로 전용은 어렵지만 실제로 폐기물의 부피는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그 독성도 한 10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핵협정을 보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일본 원자력협정은 아까 존경하는 인요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988년에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일본 내에 재처리시설, 플루토늄 전환시설, 플루토늄 핵연료 제작공장 등을 두고 있고 거기에 플루토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미 해외 위탁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하고 난 뒤에 확보된 플루토늄의 양이 한 47t 정도가 됩니다. 원자폭탄 한 6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1년부터는 자체처리장을 확보해서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생산도 가능합니다.

미일 원자력협정하고 우리 원자력협정을 보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우리가 2015년에 가장 최근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원전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핵무기로 전용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한 연구만 일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외 위탁 재처리를 허용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플루토늄은 또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 쓰레기 다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사실 이건 비용만 들고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서면합의한다고 하는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핵추진잠수함 이런 거 하려면 사실 20%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이 단서조항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저농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원전을 확대한다고 하면 저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해에 이미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와 관련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벌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부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0년이지만 한미가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려운 협상 끝에 2015년에 개정을 한 이후 그 개정을 통해서 고위급 위원회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지난 오륙 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고위급 위원회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한미 간에 이런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신뢰 문제, 원전 수출과 관련된 이해의 충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2015년 개정협정하에서도 한미 간 전략적인 원자력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뢰를 쌓아서 그 기회를 모색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렇게 해서 전략적인 협력이 적극 가동이 되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초기 단계에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마이크는 없는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차관으로 재직하다가 나갔다가 10년 만에 왔는데 한미 간의 동맹이 지난 10년간 보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돈독해졌다, 신뢰가 아주 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인 정부 때는 미사일 협정도, 미사일 지침도 폐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한정애 위원** 사거리도 폐지하고 탄두 중량도 폐지하고 그 정도의 신뢰가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2015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15년 이후에 10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돈독해졌다고 하면 이거는 개정을 할 수 있고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좀 빼 주세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입니다.

○**홍기원 위원** 대북전단 업무 실무 책임자이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맞습니다.

○**홍기원 위원** 7월 3일 날 대책회의를 통일부에서 주재하셨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회의를 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때 국토부에서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고 제 기억에 따르면 그거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홍기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희가 서면으로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국토부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다고요. 지금 이런 내용을 담당 실무 책임자까지 저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통일부가 업무를 방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풍선 날리는 게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이라는 거 얘기 다 들으셨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홍기원 위원 들으셨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홍기원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이라는 거 다 들으셨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홍기원 위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말씀하시는 거는.....

○홍기원 위원 아니, 왜 거기다가 ‘말씀하시는 거’를 자꾸 붙입니까?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이라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스’ 또는 ‘노’로만 대답하세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홍기원 위원 아,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스’ 또는 ‘노’로 대답.....

○홍기원 위원 아니, 들으셨잖아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 뜻으로 제가.....

○홍기원 위원 아니, 대북전단 담당 실무 책임자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게 군에서 관할하는 비행금지구역 위반이라는 거 들으셨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그때 회의 때는 그런.....

○홍기원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상임위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거기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농락하는 겁니까, 위원들 얘기한 거를?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기원 위원 위원장님, 통일부 실장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경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 발언에 대해서 말을 비틀어 가지고 교묘하게 피해 가려고 하는데 경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위원장님.

○홍기원 위원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거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 또 항공안전법 위반 또 국방부 관할 공역 구역상의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린 행위, 법 위반, 다 들으셨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들었고 관계부처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다시 모아서 회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외통위에 보고하시고 또 저희 의원실에는 따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지금 전술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미 간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거 외에 북한의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어떤 메시지,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건 위원 전술핵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거는 뭐 끊임없이 발신해 왔습니다.

○김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속되는 도발이지요.

○김건 위원 지속되는 도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의 절체절명의 사안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발을 하고 위협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보내는 전단에 대해서 오물 풍선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가 그거는 들어줘야 된다는 논리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건 위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장관님,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께서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다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왜 지난 정부에서는 대북전단에 대한 법을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항공안전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법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문제는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회의였고 했는데 국민들한테 잘 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님께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을 전체로 어떤 특정한 국가가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 같은 대국의 경우만 해당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똑같은 개도국에서 출발해서 선진국에 진입을 한 나라로서 이러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데 저희들이 당초 기획했을 때는 한 20여 개국 정도 정상이 오면 상당히 성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최종적으로 서른네 나라의 정상급 원수들이, 국가 정상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준비 과정에서는 40개국까지 뛰어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몇 나라가 취소하게 돼서 서른네 나라로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정상이 참여한 사람들도 자기들도 놀랐다고 그럴 정도로 참석률이 높았고 규모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주최한 정상회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정상회의였다, 굉장히 베푼다기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어떤 교훈을 나누고 그런 측면에서 각 개별 나라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해 줬던 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도 감사하다는 평도 듣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다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또 다음번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새로운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외교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한국이 그런 데서 굉장히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과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합시다.

○**한정애 위원** 저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하고 한정애 위원님 추가로 두 분만 추가질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이제 이달 말에 사도 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가 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여기서 외교부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이 회의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직 정식 대표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후덕 위원** 차관이 나가나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현지 유네스코 대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우리가 2015년에 군함도에 대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동원되고 또 가혹한 조건에서 이렇게 노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도 현장에서 제시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입장은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외교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체 역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한 등재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기본 입장으로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협의를 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 외교부는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전체 역사가 잘 반영이 돼야 등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조건이 이행될지를 담보해 낼 수가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번에도 뒤통수 맞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조금 희망이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남북 연락채널 복원 노력을 지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통일부장관님, 연락 채널이 복원돼야 되고 여기에서 상호 간에……

1분만 더 줘요. 마무리할게요.

이런 채널이 어떻게든 복원이 돼야 대화를 하고 또 평화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윤후덕 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매일 오전·오후 대북 정기통화 지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북쪽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를 들면 판문점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에 북쪽에 하지만 북쪽이 단절을 했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오전·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북쪽에 통화가 되는지 연락선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 4월부터 단절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반응이 올 때까지라도 계속 이런 접촉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윤후덕 위원** 이것 이외에는 희망이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계속 촉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2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통일부장관께……

제가 답변을 좀 듣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금지구역은 승인을 받고 뭔가를 날릴 수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날리는 장소는 다 P-518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P-518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국방부에 올해 한 해,

최근 1년 동안 비행 승인이 4596건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을 해 줬어요. 대개 드론을 날리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대북전단이 떳떳하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신청을 하게 하고요 승인을 해 주세요. 단체 뒤에 정부가 숨지 말고, 그렇지요, 법을 어기고 있는데? 떳떳하게 신청을 하게 하고 승인을 해 주세요. 국방부가 승인해 주시면 되잖아. 그리고 날리세요. 만나서 격려까지 해 주시는데 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법과 원칙을 좋아하시는 정부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체들을 만나시면 대한민국은 법이 있다, 그러니 국방부에 신청을 해라, 합참에 신청을 해라, 항공작전과에 신청해라, 신청하는 방식도 나와 있다, 이미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신청하게 하고 그러면 승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날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그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법을 지키십시오.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 강화, 소위 가치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가치라고 그래서 매우 중시합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홍기원 위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2022년 양금덕 할머니를 후보자로 추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홍기원 위원**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권위 공적사항에 보면 할머니는 초등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기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권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그것을 지금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홍기원 위원** 양금덕 할머니 모르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홍기원 위원** 그런데 2022년 차관회의에 이 안건을 올리려고 했는데 외교부에서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인권위원회에서는 외교부에 계속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교부에서 안 주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타 피해자와의 형평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 취했다고 서면으로 답을 주셔야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인권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답을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외교부에서 답을 줘야 인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것 사실관계 확인해 가지고 인권위원회에 답을 꼭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인권을 정말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 굉장히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분의 인권이 아니고 이분을 지금 포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기원 위원 아니지요. 인권위원회에서 포상 대상자로 전 국민에게 홍보까지 한 사항인데 외교부에서 아직 답을 안 줘 가지고 상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분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거지요.

장관님께서 꼭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인권위원회에 답을 주도록 하시고 우리 의원실에도 그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확인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말씀하십시오.

○이재강 위원 대북송금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두 분이 하셨는데 그 소속, 직위, 명단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출장보고서를 오늘 상임위 마치기 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에게 합니다.

안철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와 해당 부처 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께서 대북전단 단체 면담 결과보고서, 여기는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법률 검토 의뢰서 및 결과서, 이 자료를 제

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강 위원님이 요청하신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관련 공무원 출장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장관 실상 알리기 강연 동영상 이것은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관 부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교부와 통일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권칠승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안철수 위성락
윤상현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정홍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제2차관 강인선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차관보 정병원
대변인 임수석
공공외교대사 홍석인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의전장 김태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기후변화대사 김효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동렬
감사관 임동혁
조정기획관 송시진

인사기획관 황소진

정보관리기획관 강근형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강영신

아세안국장 김동배

북미국장 홍지표

중남미국장 이주일

유럽국장 최태호

아프리카중동국장 김은정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공공문화외교국장 이경아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외교정보기획국장 박장호

한반도정책국장 이준일

국제안보국장 윤종권

국립외교원

원장 박철희

교수부장 고재명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이문희

통일부

장관 김영호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통일협력국장 황태희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강연서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이승신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김선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직무대리 동승철
자문건의국장직무대리 김종진
위원회원국장직무대리 송순철
재외동포청
청장 이기철
차장 최영한
기획조정관 오진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75)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참사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2024. 6. 10. 김준형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0026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2)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2024. 6. 20. 정혜경 의원·김준형 의원·김영호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069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6)

이상 18건 6월 27일 회부됨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2)

이상 5건 7월 1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

7월 2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9)

7월 3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1)

7월 4일 회부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7월 9일 회부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2024. 7. 9.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7월 10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7월 12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이상 2건 7월 15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7월 16일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6월 27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2)

6월 27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청원 회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청원

(2024. 6. 25. 이성호 외 91인으로부터 윤종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0)

6월 30일 회부됨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

(2024. 7. 4. 김연정 외 53,9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3)

7월 4일 회부됨

○계획서 송부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2024. 6. 13. 정부 제출)

6월 27일 송부됨

○보고서 송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2024. 5. 30. 감사원장 제출)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이상 2건 2024. 5. 31.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이상 2건 2024. 6. 27. 정부 제출)

이상 5건 6월 27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문 참고자료

남북 통일 방향에 관한 의견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대통령령 제34537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6. 4.	2024. 6. 10.
외교부예규 제267호	「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2024. 6. 7.	2024. 6. 7.
외교부훈령 제216호	자율기구 “외교정보분석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6. 17.	2024. 6. 24.
외교부훈령 제217호	자율기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6. 26.	2024. 6. 20.
대통령령 제3462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7. 2.	2024. 7. 2.
외교부령 제13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7. 2.	2024. 7. 2.
통일부훈령 제691호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2024. 5. 30.	2024. 5. 30.
통일부훈령 제69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4. 5. 31.	2024. 6. 5.
통일부훈령 제693호	통일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4. 5. 31.	2024. 6. 5.
국립통일교육원훈령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4. 5. 31.	2024. 6. 5.
통일부령 제13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 6. 3.	2024. 6. 3.
통일부령 제131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2024. 6. 7.	2024. 6. 7.
통일부훈령 제695호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2024. 6. 28.	2024. 6. 28.
대통령령 제34622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2.	2024. 7. 3.
대통령령 제3462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7. 2.	2024. 7. 3.
재외동포청훈령 제31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2024. 6. 18.	2024. 6. 25.